

일본경제 주간동향(4.23-29)

핵심내용

1. 경제일반

- (일본은행, 금융정책 현행유지 결정 및 물가목표 달성시한 재연기) 일본은행은 현행 3차원(양+질+금리) 금융완화 조치를 그대로 유지(추가 완화 유보)하되, 물가안정 목표치 2% 달성시한은 2017회계연도 상반기 중('17.4-9월)에서 연도 내('18.3월)로 연기하기로 결정(4.28)하고, 구마모토 지진피해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3,000억엔)을 확정
- (내각부, 명목 GDP 600조엔 달성 위한 구체방안 제시) 내각부는 경제재정자문회의(4.25)에서 개인소비 활성화와 성장전략 가속화 등을 주 내용을 하는 명목 GDP 600조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5월 말 발표될 '경제재정 운영방침' 및 '1억총활약플랜'에 반영 예정
- (일본정부, 1억총활약플랜(안) 확정) 일본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1억총활약플랜(안)'을 확정하였으며, 5월말 각의결정하고, 시급성이 큰 내용은 7월 참의원 선거 전 경제대책으로서 제시할 예정
 -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대비 70~80% 수준으로 인상(현재는 약 50% 수준) 등, △(장시간 근무 근절) 잔업시간 단속기준 단축(1개월 100시간→80시간), △(고령자 고용 촉진) 2016-2020년도를 고령자 계속고용 및 정년 연장 촉진 집중기간으로 설정 등, △(보육 대기아동 대책) 보육시설 대기아동 2017년도 말까지 해소 등의 내용으로 구성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3월 소비자물가 동향) 3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종합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0.3% 하락, 전월대비 0.1% 상승
 - 주요 변동항목으로는 에너지부문이 전년 동월대비 대폭 하락(△13.3%)하였으며,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2.0%), 교양오락용 내구재(10.4%) 등은 상승
- (3월 소비 동향)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이 가구당 30만 889엔으로 물가변동을 제외한 실질소비지출이 전년 동월대비 5.3%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2015.3월(10.6% 하락) 이후 1년 만에 최대 폭 하락
- (3월 고용 동향) △3월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이 3.2%를 기록하면서 전월대비 0.1P 하락하여 2개월만에 실업률이 개선되었으며,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도 3월에는 전월대비 0.02P 상승한 1.30을 기록하면서 2개월만에 상승

□ **(3월 광공업생산 동향)** 3월 광공업생산지수(속보치)가 전월대비 3.6% 상승한 96.6을 기록하였으며, 자동차(+8.8%), 반도체 제조장치 등(+3.2%)의 생산이 전월대비 증가

	4.25(월)	4.26(화)	4.27(수)	4.28(목)	4.29(금)
환율(엔/달러)	111.21	110.84	111.20	108.39	(일본 휴일)
환율(원/100엔)	1,032.37	1,036.61	1,033.74	1,046.99	(일본 휴일)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7,439.30	17,353.28	17,290.49	16,666.05	(일본 휴일)
장기금리(%)	-0.075	-0.105	-0.060	-0.085	(일본 휴일)

□ **(엔/달러 환율)** 주초 일본은행이 추가 완화책을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엔화가 매도되면서 엔화 약세 기조를 보였으나, 금융정책결정회의(4.28)에서 현행 통화정책 유지가 결정되면서 엔화 재매입이 이루어져 엔화 가치 상승

- (닛케이평균주가) 최근의 주가 상승으로 당면의 이익확보를 위한 매도가 이어져 소폭 하락을 보이다가, 4.28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융완화를 보류하자 주가는 대폭 하락

□ **(기업의 사업계획 기준환율 인상 설정이 엔화약세를 저지할 가능성)** 미국 및 일본의 금융정책회의를 앞두고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둔화된 가운데 시장의 행방을 좌우하는 새로운 요인으로써 일본 국내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엔화 매입이 부상중임.

- 수출기업들은 결산발표에 2016년도 사업계획 엔/달러 기준환율(Assumed Exchange Rate)을 기존보다 엔화강세 방향(110~115엔/달러 정도)으로 설정할 전망이다, 엔화약세 압력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

3. 기타

□ **(일본 농업개혁 과제 다수(언론보도))** 일본정부 규제개혁회의는 생유(生乳)의 생산량이 20년 가까이 감소세를 보이는 주원인은 경직적인 지역 수량관리로 생산자의 노력이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바, 생유 유통 자유화에 관한 제언을 승인

□ **(파리협정 서명식 175개국 서명)**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신 기후변화체제인 파리협정* 서명식이 4.22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되어 175개국이 서명

- * △각국이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 △금세기후반에 온난화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실질적 배출량 제로 실현, △각국의 목표를 5년마다 수정,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자금지원을 의무화. 끝.

1 경제일반

1. 일본은행, 금융정책 현황유지 결정 및 물가목표 달성시한 재연기

1. 일본은행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주요 결정사항 : 금융정책 현황유지 결정

□ (추가 완화조치 유보) 일본은행은 4.28일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완화를 단행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최근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정책(2.16) 효과의 파급시차 등을 감안하여 현행 3차원 금융완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금리 측면) 마이너스 금리: 종전과 동일(☞ 정책위원 중 찬성 7명, 반대 2명)

-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 계좌중 정책잔고에 대해 -0.1% 금리 적용

○ (질적 측면) 자산매입 프로그램 : 종전과 동일(☞ 정책위원 중 찬성 8명, 반대 1명)

- 장기국채 매입(잔액기준 연간 80조엔, 평균 잔존만기 7~12년)

- ETFs(현행 연간 3조엔, 4월 이후 3.3조엔*으로 증액) 및 J-REITs(연간 900억엔)

(※) 2차원 금융완화 보완조치 일환으로 금년 4월부터 설비·인재투자에 적극적인 기업 주식을 연간 3,000억엔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 (2015.12월)

- CP 및 회사채 등 규모는 잔액기준 각각 2.2조엔, 3.2조엔 유지

○ (양적 측면) 본원통화 공급 목표(연간 80조엔 규모): 종전과 동일 (☞ 상동)

□ (구마모토 지진 관련 긴급 자금지원 실시) 또한, 구마모토 지진(4.14) 대책 일환으로 재난피해지역 금융기관 자금공급 오퍼레이션을 통해 총액 3,000억엔 규모의 대출지원(무이자)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 (물가목표 달성시한 재연기) 경기 판단에 대해서는 “기조적으로 완만한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 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유가약세 및 신흥국 경제 감속을 이유로 물가안정목표 2% 달성시한은 2017회계연도 상반기('17.4-9월)에서 연도 내('18.3월)로 또다시 연기함.

〈일본은행 성장률 및 물가 전망치(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18
실질성장률(전기비,%)	0.7	1.2	0.1	1.0
물가상승률(신선식품제외,%)	0.0	0.5	2.7(1.7)	2.8(1.8)

* 2017-18년 물가상승률 내 ()는 소비세를 추가 인상(8→10%) 영향 제외

- (구로다 총재, 필요시 추가 완화 단행)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책 현황유지 결정 관련, “지금은 금융정책의 과급 효과를 예의주시할 단계” 임을 강조하면서 추가 완화보다는 기존 정책의 실효성 평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함.
 - 다만, 앞으로도 3차원 금융완화 정책의 리스크를 매 회의 개최시마다 정기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양·질·금리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가 완화에 나설 방침임을 부언

2. 금융시장 반응 : 엔화환율 급등 및 증시 폭락 시현

- (逆서프라이즈 쇼크, 시장혼란 가중)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현황유지” 결정 보도 직후 주재국 금융시장은 추가 완화를 단행하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급격한 엔화 절상(달러당 111엔 중반→108엔 후반) 및 닛케이 평균주가 급락(보도 후 5분 만에 전일대비 900엔 낙폭)으로 요동치는 등 시장혼란이 가중되는 모습
 -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추가 금리인상 신중자세)과 유럽(추가 양적완화 유보)의 금융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조치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컸던 만큼, 금번 逆서프라이즈 쇼크로 다소 상승기미를 보이던 시장 분위기가 일시에 가라앉은 것으로 분석
 - ※ 일본경제신문이 발표한 자체조사 결과(4.27)에서도 전체 시장 참가자 (199인) 중 약 60%가 일본은행이 금번 회의에서 추가 완화 단행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

- (금융정책, 사면초가 직면) 일부 전문가는 △통화정책 수단 고갈(마이너스 금리효과 미미), △대규모 국채매입의 기술적 한계(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국채가격 폭등), △G7 정상회의를 의식한 통화정책 신중론(환율전쟁 경계감 등) 확산 등으로 일본은행의 정책여력이 소진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
- 시장에서도 금융정책 독자노선의 명백한 한계를 뚜렷하게 의식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병행하는 거시정책조합(policy mix)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

2. 내각부, 명목 GDP 600조엔 달성 위한 구체방안 제시

1.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요지

- 일본정부(내각부)는 4.25 개최된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 아베총리)에서 명목 GDP 600조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5월 말 발표될 ‘경제 재정 운영방침’ 및 ‘1억 총 활약 플랜’에 반영할 예정임.
- 구체적 방안은 개인소비 활성화와 성장전략 가속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수요확대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지향하며,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개혁을 관계 각료에게 지시함.
 - (가계에 대한 분배 확대) 내각부는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대기아동 해소 등 1억 총 활약사회가 실현될 경우 2020년도에 일자리가 117만개 증가하고, 가계 전체의 임금총액이 20.5조엔 증가하여 소비지출이 13.7조엔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 육아지원, 개호지원, 고령자 고용 촉진을 통해 일자리가 2020년도에 117만개, 2025년도에 204만개 증가하여 노동공급이 2020년도 3.3조엔, 2025년도 5.8조엔 증가
 - * 이와 함께 비정규직 처우개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시간당 임금이 2020년도 17.2조엔, 2025년도 23.7조엔 증가

* 상기를 통해 가계전체의 임금총액이 2020년도 20.5조엔, 2025년도 29.5조엔 증가하여 가처분소득이 확대되면 소비지출이 2020년도 13.7조엔, 2025년도 20.4조엔 증가

- (성장전략 가속화)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민관의 연구개발 투자총액을 GDP 대비 4%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직업 훈련 고등 교육기관의 설립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 배출을 위한 대학원 신설 등 구체화, △경영인 등 고도의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한 외국인 유치 확대 등이 제시됨.

- (소비진작) △전국평균 최저임금 1천엔 목표, △도시재생기구(UR) 임대주택 임대료 할인 등을 통해 육아세대의 주택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소득 향상 도모, △일본판 블랙프라이데이 도입, △프리미엄 상품권 지급, △2023년 종료 예정인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 영구화 등 검토함.

* 또한 비자완화 등을 통해 증가세에 있는 방일 외국인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항만정비 등 인프라 정비도 제시

2.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언론평가

○ 명목 GDP 600조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에 비해 GDP가 약 100조엔 증가하여야 하나, 내각부가 제시한 구체적 방안에서는 600조엔에 대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지 않아 설비투자나 수출을 통해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 파악이 어려움.

○ 또한 600조엔 달성의 전제로 제시된 것이 ‘명목 GDP 성장률 3% 이상’ 이나, 최근 2년간 실적(2013년도 1.7%, 2014년도 1.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0%대 전반’ 을 기록하고 있는 잠재성장률 확대가 과제가 될 것임.

○ 성장전략 가속화 중 생산성 향상 목표와 관련, 생산성을 아무리 향상 시켜도 국내에 수요가 없으면 판매를 전망하기 어려운바, 수요부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임.

○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의해 현역세대, 고령세대 할 것 없이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이 소비부진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방안에서는 ‘수익과 부담의 균형이 잡힌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내세우고 있으나, 세금이나 보험료를 억제하여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이 미 제시됨.

- 임금인상도 중요하지만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 보험료 억제로 이어지는 의료 등의 세출개혁을 시행하지 않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 소비로 환원이 불가능
- o 소비진작 방안과 관련해서는 블랙프라이데이나 프리미엄 상품권의 발행에는 재정투입이 필요하나, 재정투입을 통한 소비진작은 결국 수요를 미리 당겨쓰는 것에 불과함.

3. 일본정부, 1억총활약플랜(안) 확정

1. 1억 총활약플랜의 요지

- o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핵심이 될 ‘1억총활약플랜(안)’을 확정하였으며, 5월 중순 정식 발표하여 5월 말 각의결정을 진행할 계획임.
- 시급성이 큰 내용은 7월 참의원 선거 전에 성장전략 등과 같이 경제대책으로서 제시하고, 참의원 선거 이후 임시국회에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포함하여 제출 예정
- o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대비 70~80% 수준으로 인상, 불합리한 격차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통근수당·출장경비 등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동일하게 지급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파트타임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법 개정(2017년도 정기국회 제출) 시행 예정임.
- 또한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을 2014년 18.1%에서 2020년도 1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조성금 등이 활용될 예정

- (장시간 근무 근절) 선진국 중에서 가장 긴 근로시간 조정을 위해 노동 기준감독서의 산업시간 단축 기준을 ‘1개월 100시간’ 에서 ‘80시간’ 으로 줄일 것을 제시함.
 - 「노동기준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협정에 의해 시간 외 근무를 월 45시간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특별조건부협정을 통해 45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 가능
- (고령자 고용 촉진) 또한 2016-2020년도까지 5년간을 고령자 계속고용 및 정년 연장 촉진을 위한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조성제도를 확충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연내에 구체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 (보육 대기아동 대책) 보육시설의 대기아동을 2017년도 말까지 해소하고, 방과 후 아동클럽의 대기아동도 2019년도에 해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숙련된 보육교사의 급여인상 등 인재확보 방안의 강화도 제시함.

2. 1억 총 활약 플랜에 대한 평가

- 일본정부가 1억 총 활약플랜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제시하는 배경에는 기업수익 개선의 혜택을 비정규직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임.
- 그러나, 플랜(안)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목표는 조성금 등을 지원하여 기업이 행동에 나서게 하는 등의 방안이 많아서 기업행동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기업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임.
-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일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임금격차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거나,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는 등 방침을 제시해 왔으나, 이것만으로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80% 수준으로 인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정규직의 임금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총 인건비를 증액해야 하며, 총 인건비를 증액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규직의 임금 삭감이 불가피

- 상기 관련, 경제계(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두)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한 기업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비용 증가가 될 것” 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 금년 노사 임금협상에서는 비정규직의 월급 인상률이 정규직의 월급 인상률에 비해 클 것이라고는 하나, 인력부족에 따른 임금인상의 성격이 강해서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것인지는 전망할 수 없음.
-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대책 이외에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지역한정 정사원 등을 정착시키는 등 기존의 정사원 중심 관행을 개선하는 개혁도 필요할 것임.
- 한편, 1억총활약사회는 아베 총리가 작년 가을 아베노믹스 제2단계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제시하였으나, 제시된 정책의 성격이 격차해소를 위해 '분배'를 중시하는 야당(민진당)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정책을 채용함으로써 쟁점을 없애려는 의도가 엿보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4. 2016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1. 핵심내용

- 3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
 - 2015년 11월 이후 5개월 만에 하락하였으며, 지난 2013년 4월(0.5% 하락)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 하락
- 주요 변동항목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전년 동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13.3%) 하였으며,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2.0%), 교양오락용 내구재

(10.4%) 등은 상승

2. 상세내용

- 일본 총무성은 2016년 4월 28일 ‘2016년 3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조사’ 결과를 발표
 - 총무성 통계국은 전 품목을 포함한 종합지수,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 식품(주류제외)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지수 등 매월 3가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
 - 일본 정부 및 일본은행은 3가지의 지수 중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활용
 - * 아베노믹스의 ‘향후 2년내 2% 물가상승률 달성’ 목표도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의 2% 상승을 의미
- 3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
 - 전 품목을 포함한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
 - 식품(주류제외)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 전월 대비로도 0.3% 상승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추이(2010년=100)〉

	‘15.3	4	5	6	7	8	9	10	11	12	‘16.1	2	3
지수	103.0	103.3	103.4	103.4	103.4	103.4	103.4	103.5	103.4	103.3	102.6	102.5	102.7
전년동월비(%)	2.2 (0.2)	0.3 (0.0)	0.1	0.1	0.0	△0.1	△0.1	△0.1	0.1	0.1	0.0	0.0	△0.3
전월비(%)	0.4	0.3	0.2	0.0	0.0	0.0	0.0	0.1	0.0	△0.2	△0.7	0.0	0.1

* ()는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효과 제외

- 3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종합지수는 2015년 11월 이후 5개월 만에 하락하였으며, 지난 2013년 4월(0.5% 하락)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 하락
- 주요 변동항목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전년 동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

(△13.3%) 하였으며,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2.0%), 교양오락용 내구재(10.4%) 등은 상승

- 에너지 구성품목 중 전기요금(△9.0%) 및 도시가스요금(△15.3%)이 하락 하였으며, 석유제품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17.2% 하락
- 석유제품 중 등유는 전년 동월 대비 27.8% 하락하였고, 가솔린은 20.5% 하락

5. 2016년 3월 소비, 고용, 광공업생산 동향

- (3월 소비 동향)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이 가구당 30만 889원으로 물가변동을 제외한 실질소비지출이 전년 동월대비 5.3%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2015.3월(10.6% 하락) 이후 1년 만에 최대 폭 하락
 - 소비지출 내역으로는 ‘교통·통신’이 전년 동월대비 12.1% 감소, ‘피복 및 신발’이 12.1% 감소, ‘교양오락 서비스’ 4.5% 감소
 - 한편, 근로자 가구의 엔겔계수가 23.9%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까지 22%를 내외에서 움직임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엔화약세로 인한 수입비용 증가, 인력부족에 의한 인건비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및 외식비용이 작년 초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
- (3월 고용 동향) 3월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이 3.2%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0.1P 하락하여 2개월만에 실업률이 개선
 - 한편, 공공직업소개소의 구직자 수에 대한 구인 수를 나타내는 유효 구인배율(계절조정치)이 3월에는 전월대비 0.02P 상승한 1.30을 기록하면서 2개월만에 상승
- (3월 광공업생산 동향) 3월 광공업생산지수(속보치)가 전월대비 3.6% 상승한 96.6을 기록하였으며, 자동차(+8.8%), 반도체 제조장치 등

(+3.2%)의 생산이 전월대비 증가

- 1-3월 광공업생산은 2월 대폭적인 감소($\Delta 6.2\%$)의 영향에 의해 전기대비 1.1% 감소한 96.0을 기록
- 한편, 4월에는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동 전망치에는 4월 중순 이후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 경제산업성은 지진의 영향을 반영하게 되면 4월에는 전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6. 환율/주가

	4.25(월)	4.26(화)	4.27(수)	4.28(목)	4.29(금)
환율(엔/달러)	111.21	110.84	111.20	108.39	(일본 휴일)
환율(원/100엔)	1,032.37	1,036.61	1,033.74	1,046.99	(일본 휴일)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7,439.30	17,353.28	17,290.49	16,666.05	(일본 휴일)
장기금리(%)	-0.075	-0.105	-0.060	-0.085	(일본 휴일)

- (엔/달러 환율) 주초 일본은행이 추가 완화책을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엔화가 매도되면서 엔화 약세 기조를 보였으나, 금융정책결정회의(4.28)에서 현행 통화정책 유지가 결정되면서 엔화 재매입이 이루어져 엔화 가치 상승
- (닛케이평균주가) 최근의 주가 상승으로 당면의 이익확보를 위한 매도가 이어져 소폭 하락을 보이다가, 4.28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융완화를 보류하자 주가는 대폭 하락

7. 기업의 사업계획 기준환율 인상 설정이 엔화약세를 저지할 가능성

1. 핵심내용

- 미국 및 일본의 금융정책회의를 앞두고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둔화된 가운데 시장의 행방을 좌우하는 새로운 요인으로써 일본 국내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엔화 매입이 부상중임.

- 수출 기업들은 결산발표에 2016년도 사업계획 기준환율(Assumed Exchange Rate)을 1달러=110~115엔 정도로 기존보다 엔화강세 방향으로 설정할 전망이다, 엔화약세 압력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

2. 상세내용

- 수출기업은 해외 매출을 국내에 회귀시킬 때에 대비하여 달러 매도·엔화 매입의 선물환예약을 시행하나, 달러당 107엔대 수준의 엔화강세 시 보이지 않던 수출기업의 엔화매입 움직임이 달러당 110엔 이하로 엔화약세가 진행되면서 확대되고 있음(다나카 세이치 미즈호은행 국제환율부 차장).
- 일본은행이 2016.3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短觀)에 의하면, 수출기업이 많은 대기업 제조업의 2016년도의 사업계획 기준환율은 117엔 46전으로 최근 환율보다 대폭 엔화약세 수준이었는데, 2016.5월 중순까지 주요 수출기업이 발표 예정인 사업계획 기준환율은 더욱 엔화강세 방향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우세
- 수출 기업의 개별 사업계획 기준환율은 110-115엔 수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 경우 ‘(달러당) 110~112엔 수준에서 수출기업의 엔화 매입 수요가 대규모로 확대 될 것(다카시마 오사무 시티그룹 수석Fx시장전략가)’ 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엔화약세 압력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엔화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것은 미국 및 일본의 금융정책으로 시장에서는 최근 추가 금융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중인 일본은행의 금융결정회의 결과에 주목도가 모이고 있음.
- 한편 일본은행이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을 시에는 엔화 매입이 재개되어 수출 기업의 엔화 매입이 향후 엔화강세를 더욱 진행시킬 가능성

3 기타

8. 일본 농업개혁 과제 다수(언론보도)

1. 생유 유통제도 개혁 관련

- 일본정부 규제개혁회의가 4.8 우유 및 버터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생유 유통 자유화를 요청한 제언을 승인한 것과 관련, 현행의 경직적인 생유 유통제도는 농업분야의 견고한 암반 제도였다고 비판함.
 - ※ (현행 제도) 농협이 지역별로 집하·판매를 독점하여 생산량 및 용도를 결정, 농협단체에 출하하지 않으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생유생산량의 95% 이상이 농협 경유
 - ※ (제언 내용) 국가가 지정한 농협단체가 독점적으로 생유를 집하·판매하는 현행 구조를 수정하여 낙농가가 생유의 생산량 및 판매처를 선정하고 모든 낙농가가 공평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 2016.6월까지 마련하는 답신에 포함시킬 예정
 - ※ (기대 효과) 생산자의 경영판단을 통해 낙농가가 생산량 확대 및 고수익이 실현 가능한 판매처 개척 효과 기대
- 매년 4-5%의 생산자가 이농하여 원료 생유의 생산량이 20년 가까이 감소세를 보이는 주원인은 경직적인 지역 수량관리로 생산자의 노력이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바, 출하지역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유통관리로의 변경이 필요

2. 농업자재 가격인하 관련

- 농림수산성이 규제개혁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비료 및 농약의 가격은 한국의 2-3배, △농기구 비용부담은 작업 위탁이 보급된 한국 대비 5배 이상, △한국의 60kg당 쌀 생산비는 8,571엔 (2013년 현재)으로 일본 농가평균의 약 60%*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쌀 생산비는 아직 인하 여지가 큼.
 - * 일본의 15ha 이상 대규모 농가 평균(1만 1,424엔)과 비교할 경우 80% 미만
- 또한, △일본의 농약 가격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약 7% 상승, △농업 기계 및 농산물 유통경비도 2004년 대비 대체로 상승하였는바, 비용 인하를 위해서는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할 필요

- 농협은 농가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농가가 자주적으로 설립한 조직인바, 농가 자재 등의 공동 구입 또는 농산물 공동 판매 행위에 대해 독점 금지법 적용이 제외되고 있으나, 상기 수치 등을 고려시 농협 설립 이후 실제로 농가를 위해 기능해왔는지 의문을 제기함.
- 2016.4월에 시행된 개정농협법은 재차 농협의 역할을 명기, 농협도 자기개혁에 임하게 되었는바, 농업 자재 가격 인하 등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9. 파리협정 서명식에서 175개국 서명

1. 파리협정에 175개국 서명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신 기후변화체제인 파리협정* 서명식이 4.22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되어 175개국이 서명함.
 - * 2015.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에서 채택된 2020년 이후의 신 기후변화체제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196개 국가가 참가
- COP 21의 의장국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등 60개국의 정상에 참가, 일본에서는 요시카와 모토히데 UN 대사가 출석하였으며, 국제협정 서명 개시일의 조인 국가수로는 과거 최대
- (파리협정의 내용) △각국이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 △금세기후반에 온난화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실질적 배출량 제로 실현, △각국의 목표를 5년마다 수정,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자금지원을 의무화
- 금번 서명은 파리협정의 내용에 찬성하여 의회 등 국내 승인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비준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절차로, 향후 각국에서 국내 비준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서명식에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시간이 급박하다. 세계는 파리에서의 합의를 함께 인식해야한다’ 며 국제사회에 협조를 촉구,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모든 국가에 조기 협정 참가를 촉구한다’ 고 강조, △

장가오리 중국 부총리는 ‘2016.9월까지 국내 법적 절차를 끝내겠다’ 며
비준을 서두를 생각을 제시

2. 향후 전망 및 우려

- 파리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최소 55개국의 비준이 필요함.
 - 온실가스의 2대 배출국인 미국 및 중국(배출량의 총 38%*를 차지)은 2016.3월의 정상회담에서 연내에 비준할 방침을 이미 표명하였는바, 협정의 발효 가능성은 우세
 - *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중국 20.1%, 미국 17.9%, EU 12.1%, 러시아 7.5%, 인도4.1%, 일본 3.8%, 기타 34.5%
- 다만, 미국은 2017년 초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공화당이 정권을 쥐게 되면, 규범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어 예정대로 비준하여 규범에 참가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면도 존재함.
 - 과거 미국은 1997년 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참가할 의향을 표명한바 있으나, 그 후 중국 등의 불참을 이유로 이탈한 경위 존재
 - 이번에도 미국이 이탈하면 여타국들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는바, 온실가스 감축 기운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세계는 미국 대선의 움직임을 주시중
- 마루카와 타마요 일본 환경대신은 4.22 각의후 기자회견에서 국내 비준 시기에 대해, ‘가능한 한 조기에 진행하겠다’ 고 말하는데 그쳐 비준은 빨라도 2017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는 등 일본에도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의 방침을 확인하려는 ‘관망세’ 가 존재함.
 - 일본은 감축목표 제출도 G7 중에서 가장 늦었는바, 2016.5월의 G7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파리협정 조기 발효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면 지구온난화 대책에서 존재감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존재

/끝/